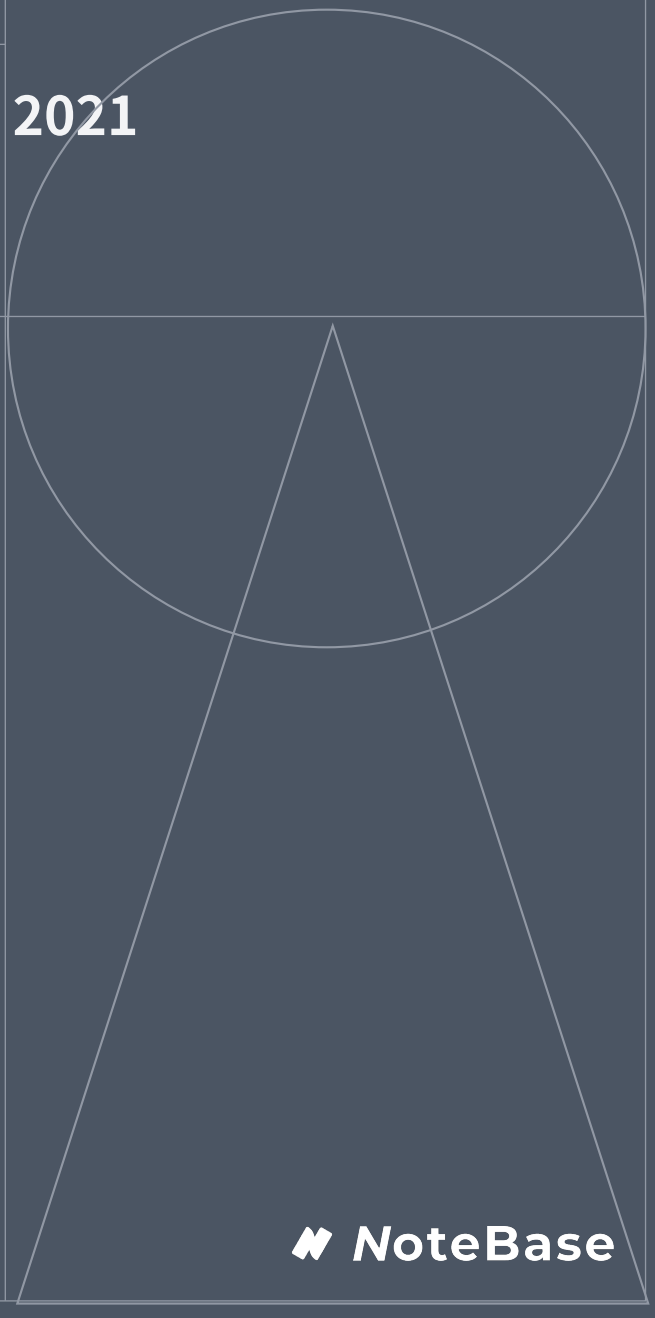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1

문 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가)	(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를 정치 현상으로 보는가?	예	아니요

①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③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④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는 국가 활동뿐 아니라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도 정치로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 현상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자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를 정치 현상으로 보는 (가)는 넓은 의미의 정치,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 (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나타낸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① X: (가)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의사 결정도 정치 현상으로 보므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를 **국가 권력과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하는 (나)**이다.

② O: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은 시설의 편익이나 부담을 어느 지역이 맡을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가)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정치로 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정치 현상에 포함한다.

③ X: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그 자체로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에 관한 활동이 아니므로 (나)는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과 조정도 정치 현상으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 (가)**이다.

④ X: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법률을 만드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나)도 **정치 현상으로 본다**. 넓은 의미의 정치인 (가) 역시 국가의 활동을 포함하므로 입법 활동은 두 관점 모두에서 정치 현상이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② 1980년대 후반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③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④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1970년대에는 미·소 간 긴장 완화와 미·중 관계 개선으로 **데탕트(긴장 완화)**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도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공산 진영을 배제했다는 설명은 당시 외교 방향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1970년대는 미·소 간 긴장 완화와 미·중 관계 개선 등으로 냉전의 대립이 완화되는 데탕트가 전개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1973년 6·23 선언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냉전 체제의 강화'와 '공산 진영을 배제'했다는 표현을 각각 긴장 완화와 외교 관계의 다변화로 고쳐야 한다.

② O: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는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선지는 수교가 모두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기에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③ O: 1990년대에는 소련 해체 등으로 탈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념 대립의 비중이 줄고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한편, 교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외교 관계를 넓혔다.

④ O: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는 공적 개발 원조(ODA)의 지원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가입 승인을 거쳐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 개발 협력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NoteBase

문 3. 다음은 갑국의 선거구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전>

A	B	C
D	E	F
G	H	I

<후>

a_1	a_2	b_1	b_2	c_1	c_2
a_3	a_4	b_3	b_4	c_3	c_4
d_1	d_2	e_1	e_2	f_1	f_2
d_3	d_4	e_3	e_4	f_3	f_4
g_1	g_2	h_1	h_2	i_1	i_2
g_3	g_4	h_3	h_4	i_3	i_4

※ 갑국은 시기별 하나의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만 존재한다. 또한 선거구제 변화 전후의 총의원수는 36명으로 같다.

<보기>

ㄱ. 유권자와 대표 간 유대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ㄷ.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유리하다.

ㄹ. 사표 발생 증가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의원수가 36명으로 같은데 선거구가 9개에서 36개로 늘었으므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던 중·대선거구제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뀐 것이다. 선거구가 좁아져 후보자 정보를 얻기 쉬워지는 반면, 당선자 외의 후보에게 준 표가 사표가 되어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지기 쉽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그림에서 변화 전 선거구는 A~I의 9개이고, 변화 후에는 각 선거구가 4개로 나뉘어 총 36개가 된다. 총의원수는 전후 모두 36명이며 시기별로 하나의 선거구제를 채택하므로, 변화 전에는 선거구마다 4명을, 변화 후에는 1명을 선출한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변화이다.

ㄱ. X: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범위가 좁아져 유권자가 대표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쉽다. 따라서 유권자와 대표 간 유대 관계는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기 쉬워진다**.

ㄴ. X: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으면 군소 정당도 일부 의석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한 명만 뽑으면 지지가 분산된 군소 정당은 의석을 얻기 어렵다. 소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 형성과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중·대선거구제의 일반적인 단점이다.

ㄷ. O: 선거구의 범위가 좁아지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지역 활동과 평판을 접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하다.

ㄹ. O: 사표는 투표했지만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별로 한 명만 당선되므로 **낙선한 모든 후보에게 준 표**가 사표가 된다. 여러 명을 선출할 때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쉬워,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과 차지한 의석의 비율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

옳은 보기는 ㄷ, ㄹ이므로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복수 정당제 유형 (가)와 (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가)	(나)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	아니요	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유리한가?	예	아니요

① (가)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② (가)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렵다.

③ (나)인 국가에는 2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④ (나)가 (가)보다 민주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이다. 다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유리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므로 다당제이다. (나)는 다양한 의견의 반영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므로 양당제이다.

① O: 다당제에서는 의석이 여러 정당에 분산되어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하므로, 여러 정당이 **의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하다.

② X: 다당제에서는 대립하는 정당 사이에 **제3의 정당이 중재**할 수 있어 타협과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려운 것은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양당제의 일반적 특성이다.

③ X: 양당제는 정당이 두 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두 거대 정당이 정권 획득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 체제이다. 따라서 양당제 국가에도 소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다.

④ X: 양당제와 다당제는 정당 간 경쟁 구조를 구분한 것으로, **정당 체제만으로 민주성의 우열을 단정할 수 없다**.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당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NoteBase

문 5.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②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

정답 3번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국회법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하나의 정당이 아니어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기한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NoteBase

④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문 6.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약 없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정답 3번

①

근로 3권은 근로자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NoteBase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NoteBase

③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권리**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 전반에 제약 없이 행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9.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례>
◯ 14세인 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
◯ 을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았다.
◯ 병은 갑자기 나타나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 대문이 열린 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 정은 친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기>
ㄱ. 갑은 책임능력이 없다.
ㄴ. 을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ㄷ. 병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ㄹ. 정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ㄱ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배제되는 연령은 **14세 미만**이다. 갑은 14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ㄴ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자구행위이다. 해외로 도주하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붙잡는 행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NoteBase

ㄷ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병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ㄹ

정이 친구의 돈을 훔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친구가 그 사실을 몰랐어도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teBase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같은 회사 직원 병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였다. 갑은 민사소송 제기 없이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려 한다.
◯ 을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진범이 잡혀 무죄로 석방되었다. 억울한 을은 ㉡ 형사보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다.

①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② 불구속 수사 후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 모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배상명령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병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 제2항(제258조제1항 · 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NoteBase

②

피의자보상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인정된다. 구금 없이 불구속 수사만 받은 사람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보상할 구금이 없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③

형사보상은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인정된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NoteBas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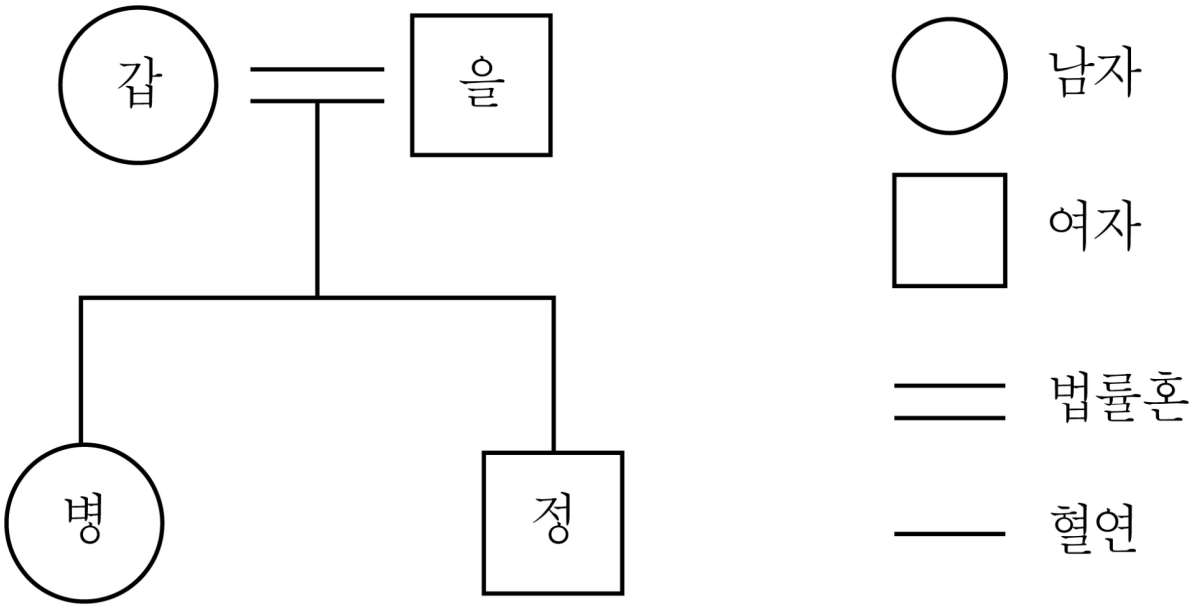
㉠ 배상명령은 법원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 형사보상은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피의자·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와 구별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 제2항(제258조제1항 · 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 후 자녀 병과 정을 낳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과 병의 전 재산은 각각 14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②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③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④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4번

NoteBase

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공동상속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인의 1.5배**이므로 을·병·정의 상속 비율은 3:2:2이다. 정은 14억 원의 2/7인 4억 원을 상속받는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②

병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갑과 을이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한다. 을은 병의 재산 14억 원의 절반인 7억 원을 상속받는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NoteBase

④

병이 먼저 사망하면 **부모 갑과 을이 각각 7억 원을 상속**하고, 형제자매인 정은 상속받지 못한다. 이후 갑이 사망하면 지문에 명시된 **사망 당시 전 재산 14억 원**을 **배우자 을과 자녀 정이 3:2의 비율로 상속**한다. 이 14억 원에 병에게서 받은 7억 원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정의 최종 상속액은 14억 원의 $\frac{2}{5}$인 5억 6천만 원이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NoteBase

문 11.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는데, 사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사회가 같은 경로로 변동한다.
(나) 사회는 특정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변동한다.

①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②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의 순환론은 사회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고 본다. 반복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가)는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보는 진화론이고, (나)는 사회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고 보는 순환론이다.

① X: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은 **(나)의 순환론**에 해당한다. 순환론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려 해도 결국 쇠퇴와 재생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의 진화론은 사회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낙관적 관점을 취한다.

② X: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가)의 진화론**이다. (나)의 순환론은 발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와 퇴보도 나타난다고 본다.

③ X: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은 **두 이론 모두**에 해당한다.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정해진 발전 경로를 따른다고 보고, 순환론은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 변동을 일정한 경로나 반복 과정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④ O: (가)의 진화론은 사회가 진보한다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므로 미래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순환론은 발전과 퇴보가 반복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변동의 시기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NoteBase

문 12.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국은 오랜 전쟁 끝에 B 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하였다.
식민통치 하에서 B 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A 국의 의복을 받아들이면서, B 국의 고유한 의복은 자취를 감추고 A 국의 의복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A 국에서는 B 국의 고유한 향신료를 A 국 전통음식에 접목시킨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즐기게 되었다.

① A 국에서는 문화 융합, B 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하였다.

② A 국과 달리 B 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③ B 국과 달리 A 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④ A, B국 모두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 국에서는 전통음식에 B 국의 향신료를 접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으므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B 국에서는 고유한 의복이 사라지고 A 국의 의복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A 국은 자국의 전통음식에 B 국의 향신료를 접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문화 동화는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B 국의 고유한 의복이 사라지고 A 국의 의복으로 대체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직접 전파는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접 접촉하면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이고, 간접 전파는 책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정복과 식민통치로 두 사회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의복과 향신료가 전해졌으므로, A 국과 B 국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③ X: 강제적 문화 접변은 외부의 강압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발적 문화 접변은 스스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A 국은 B 국의 향신료를 자국 음식에 스스로 접목했으므로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B 국 역시 A 국의 의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제시되어 있다.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복의 수용까지 강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X: 내재적 요인은 한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발명과 발견이고, 외재적 요인은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파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다. A 국은 B 국의 향신료를, B 국은 A 국의 의복을 받아들였으므로 두 나라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을 겪었다. A 국에서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졌더라도 그 변화의 계기가 다른 사회에서 전해진 향신료이므로, 이를 내재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문 1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연구 목적: 청소년의 ㉠ 학교 적응 정도에 ㉡ 이성교제 여부가 미치는 영향 분석
◯ 가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적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연구 방법
— 조사 대상: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300명, ㉣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 300명
— 조사 도구: ㉤ 학교 적응 정도를 학교 생활 적응 정도, 학교 친구 적응 정도, 학교 수업 적응 정도로 구체화하여 측정한 값을 얻기 위해 개발된 질문지

<보기>
ㄱ.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시행하였다.
ㄴ. ㉠은 종속 변수, ㉡은 독립 변수이다.
ㄷ. ㉢과 ㉣을 합한 것이 모집단이다.
ㄹ.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 연구는 **이성교제 여부가 학교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므로, 이성교제 여부가 독립 변수이고 학교 적응 정도가 종속 변수이다. 추상적인 학교 적응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로 바꾼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가설을 설정하고 질문지로 측정한 자료를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양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방법론적 이원론은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주관적 의미를 포함하므로 자연 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질적 연구의 바탕이 된다.

ㄴ. O: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설정한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그 영향으로 달라지는 결과로 설정한 변수이다. 이 연구의 가설은 **이성교제 경험 여부에 따라 학교 적응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이 독립 변수이고 ㉠이 종속 변수이다. 이는 가설에서 설정한 관계이며, 조사 결과로 인과 관계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ㄷ. X: ㉢ 300명과 ㉣ 300명을 합한 600명은 실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이다. 모집단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대상 전체이고, 표본은 그 모집단에서 실제 조사를 위해 뽑은 일부이다. 따라서 두 조사 집단을 합한 것을 모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ㄹ. O: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은 학교 적응 정도를 학교 생활 적응 정도, 학교 친구 적응 정도, 학교 수업 적응 정도로 구체화하여 측정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빈농의 ㉠ 장남으로 태어난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결심하였다. ㉡ 갑은 △△은행, □□회사 중 어디에 취업하는 것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을지를 고민하였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은행에 ㉢ 평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갑은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 △△은행의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중산층이 되었다. 갑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 ○○은행에 다니는 을을 만난 후 그가 ㉤ 은행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고 무척 부러워하였다.

<보기>

ㄱ. ㉠은 귀속지위에, ㉢과 ㉤은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ㄴ.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ㄷ. ㉣은 갑의 세대 내 이동이면서 세대 간 이동이다.
ㄹ. ㉤과 ㉤은 모두 갑의 준거 집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빈농 가정 출신인 갑이 중산층이 된 변화는 자신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 **세대 내 이동**이면서 부모 세대와 비교한 **세대 간 이동**이다. 같은 지위 상승도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귀속지위는 개인의 의사나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이고, 성취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활동을 통해 얻는 지위이다. ㉠ 장남은 **출생에 따라 주어진 지위**이므로 귀속지위이다. ㉢ 평사원과 ㉤ 은행장은 취업이나 승진을 통해 얻은 지위이므로 성취지위이다.

ㄴ. X: 역할 갈등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지위에 따르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여 생기는 갈등이다. ㉡에서 갑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같은 목적 아래 두 취업처 중 어디가 나을지 고민한다. 서로 다른 지위의 역할 요구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취업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다.

ㄷ. O: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갑이 평사원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은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난 상승 이동이다. 또한 빈농인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갑은 중산층이 되었으므로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은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에 모두 해당**한다.

ㄹ. X: 준거 집단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지위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갑이 을의 승진을 부러워한다는 사실만으로 을이 다니는 ㉥ ○○은행을 갑의 준거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 은행장은 갑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이지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둘을 모두 준거 집단이라고 한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②이다.

NoteBase

문 15.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계층 \ 국가	갑국	을국
A	30 %	60 %
B	10 %	25 %
C	60 %	15 %

①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②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③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④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나라에서 같은 비율은 60%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갑국의 하층과 을국의 중층은 각각 60%이다. 을국은 **중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으로,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의 갈등을 완충하여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국이 피라미드형이면 하층의 비율이 가장 크고 상층의 비율이 가장 작으므로 C는 하층, A는 중층, B는 상층이다. 이때 을국은 상층 25%, 중층 60%, 하층 15%로,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이다. 중층의 비율이 작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큰 모래시계형이 아니다.

② X: 갑국에서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가 되는 경우는 하층 60%, 상층 30%이다. 따라서 C는 하층, A는 상층, B는 중층이며, 갑국의 중층 비율은 10%이다. 상층과 하층에 비해 중층의 비율이 작은 **모래시계형**이며, 중층의 비율이 큰 타원형이 아니다.

③ X: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면 A는 B보다 낮은 계층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다. 따라서 **C는 상층, B는 중층, A는 하층**이다. 을국은 상층 15%, 중층 25%, 하층 60%로, 아래 계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피라미드형이다.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다.

④ O: 갑국의 비율 30%·10%·60%와 을국의 비율 60%·25%·15%에서 공통된 값은 60%뿐이다. 갑국의 하층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같으려면 C가 하층, A가 중층이어야 하므로 B는 상층이다. 갑국은 상층 10%, 중층 30%, 하층 60%인 피라미드형이고, 을국은 상층 25%, 중층 60%, 하층 15%인 다이아몬드형이다. 을국처럼 **중층의 비율이 큰 구조**에서는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의 갈등을 완충하므로 사회 통합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oteBase

문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질GDP가 감소하였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총공급의 변동은 없다)

① 갑국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갑국의 총수요는 감소하였다.

③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의 사례이다.

④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의 사례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확대 통화 정책의 사례는 국·공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다.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하락한다. 따라서 경기 회복 정책을 시행하기 전 갑국의 물가는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② O: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합한 수요이다. 자료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하여 실질 GDP가 줄었으므로 총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가 나타난 것이다.

③ O: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가계가 세금을 내고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줄여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는 ㉠ 확대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④ X: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매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 확대 통화 정책의 사례로 고치려면 국·공채를 '매각'이 아니라 **'매입'**한다고 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대금을 시중에 지급하여 통화량을 늘린다.

NoteBase

문 17. 표는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A는 모두 판매된다)

(단위: 원)

구분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평균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비용	500	1,100	1,800	2,600	3,500	4,600	5,800

※ 평균 수입 $= \frac{\text{총수입}}{\text{생산량}}$

①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차 커진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③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④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평균 수입이 1,000원이므로 생산량이 3개일 때 이윤은 1,200원, 5개일 때는 1,500원이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이윤은 **5개일 때 300원 더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평균 수입은 제품 한 개당 얻는 수입이다.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되므로 총수입은 평균 수입에 생산량을 곱한 금액이며,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① X: 평균 수입이 모든 생산량에서 1,000원으로 같으므로 총수입은 생산량 1~7개에서 차례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이다.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1,000원으로 일정하다**.

② X: 총비용 행에서 인접한 생산량의 금액을 빼면, 생산량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날 때 총비용 증가분은 1,100 − 500 = 600원이다. 이후 1개씩 늘어날 때의 증가분은 차례로 700원, 800원, 900원, 1,100원, 1,200원이다. 따라서 총비용 증가분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커진다**.

③ O: 생산량이 3개일 때 총수입은 1,000 × 3 = 3,000원이고, 이윤은 3,000 − 1,800 = 1,200원이다. 생산량이 5개일 때 총수입은 1,000 × 5 = 5,000원이고, 이윤은 5,000 − 3,500 = 1,500원이다. 따라서 **5개일 때의 이윤이 3개일 때보다 300원 크다**.

④ X: 표의 생산량 1~7개에서 이윤은 차례로 500원, 900원, 1,200원, 1,400원, 1,500원, 1,400원, 1,200원이다. 제시된 범위에서 이윤은 **생산량 5개일 때 최대**이다. 5개에서 6개로 늘리면 총수입은 1,000원 증가하지만 총비용은 1,100원 증가하므로 이윤이 오히려 100원 감소한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수요함수: $Q_D = 100 - 3P$
공급함수: $Q_S = -20 + P$

①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

②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

③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④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성립한다. 두 함수를 같게 놓고 풀면 균형 가격은 30이며, 이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모두 1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격 25를 두 함수에 대입하면 수요량은 $100 - 3 \times 25 = 25$, 공급량은 $-20 + 25 = 5$이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25 - 5 = 20$만큼 많으므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 20**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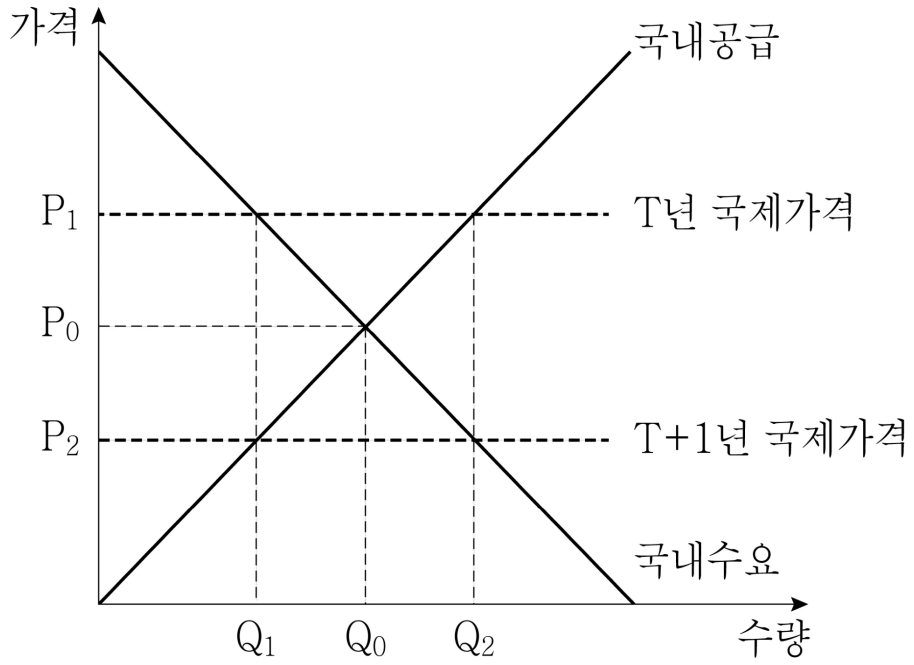
② X: 수요함수 $Q_D = 100 - 3P$에서 가격의 계수가 -3이므로, 가격이 1만큼 상승하면 수요량은 3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함수이다.

③ O: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100 - 3P = -20 + P$이다. 이를 정리하면 $4P = 120$이므로 균형 가격은 30이다. 이 가격을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20 + 30 = 10$이며, 수요함수에서도 $100 - 3 \times 30 = 10$이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④ X: 가격 상한제는 거래 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하여 소비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실제 가격을 낮추려면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 3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정하면 기존 균형 가격 30에서의 거래가 허용되므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

NoteBase

문 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_1, P_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



①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②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_0Q_2이다.

③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④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frac{P_0P_2 \times Q_1Q_2}{2}$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T+1년에는 무역을 하지 않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므로 **국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이익**이 생긴다. 총잉여 증가분은 이 두 이익을 나타내는 삼각형 넓이의 합인 $\frac{P_0P_2 \times Q_1Q_2}{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격 P_0, 수량 Q_0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무역을 하므로, 무역을 할 때 국내가격은 각 연도의 국제가격과 같아진다.

① X: T년 가격 P_1에서 국내 공급량은 Q_2, 국내 수요량은 Q_1이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갑국은 초과 공급분인 Q_1Q_2만큼을 **수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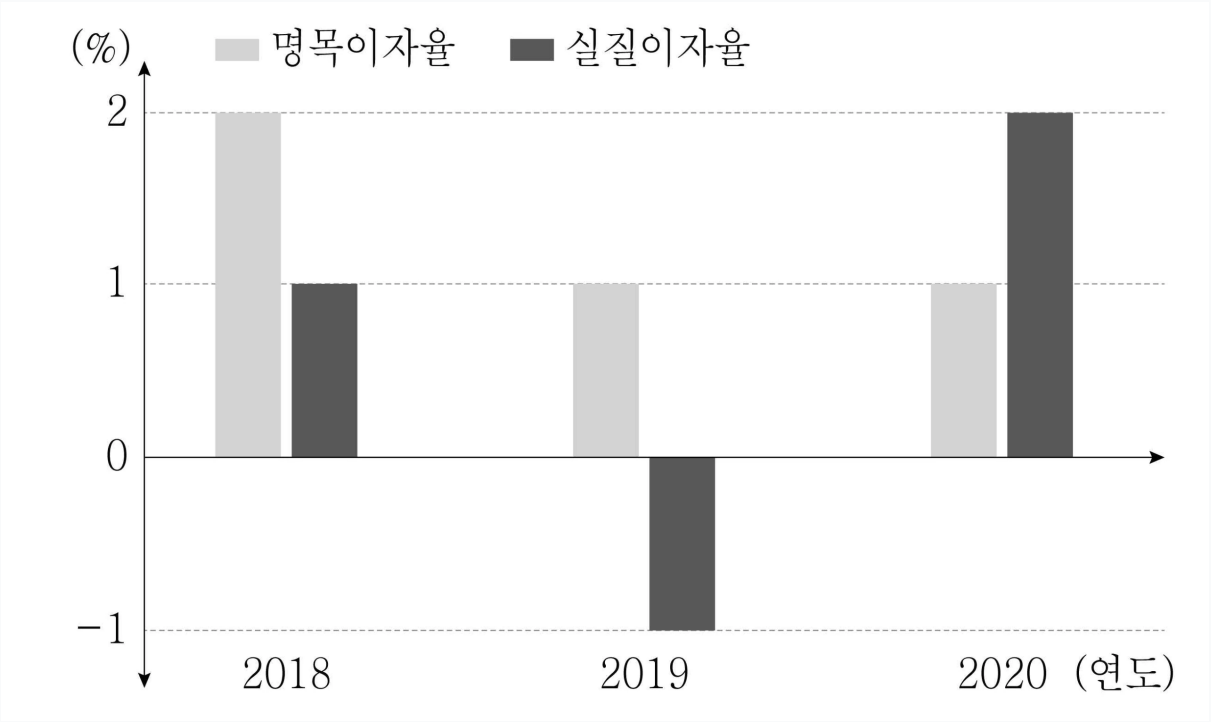
② X: T+1년 가격 P_2에서 국내 공급량은 Q_1, 국내 수요량은 Q_2이다. 따라서 교역량은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수입량**이며, $Q_2 - Q_1$, 즉 선분 Q_1Q_2의 길이이다. Q_0Q_2는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늘어난 소비량일 뿐이다.

③ X: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것으로, 그래프에서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시장가격선 위인 영역의 넓이이다. T+1년에는 가격이 P_1에서 P_2로 낮아지고 소비량도 Q_1에서 Q_2로 늘어나므로 **소비자 잉여는 T+1년이 더 크다**.

④ O: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무역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T+1년에는 국내 생산량이 Q_0에서 Q_1로 줄어든다. 이 구간에서는 국내 생산비용이 수입가격보다 높으므로 수입으로 대체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며, 그 이익은 공급곡선과 P_2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이다. 한편 소비량이 Q_0에서 Q_2로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가 수입가격보다 높으므로 추가 소비의 이익이 생기며, 이는 수요곡선과 P_2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이다.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고 밑변의 합은 수입량**이므로, 높이 P_0P_2와 밑변의 합 Q_1Q_2를 이용하면 총잉여 증가분은 $\frac{P_0P_2 \times Q_1Q_2}{2}$이다.

NoteBase

문 20.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②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더 낮아졌다.

④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20년에는 명목이자율이 1%, 실질이자율이 2%이므로 **물가 상승률이 -1%**이다. 물가 상승률이 음수라는 것은 전년보다 물가 수준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명목이자율은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이자율이고, 실질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이자율이다. 이 문항에서는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이용하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면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연한 막대는 명목이자율, 진한 막대는 실질이자율을 나타내며 단위는 %이다.

① X: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2% - 1% = 1%이고, 2019년은 1% - (-1%) = 2%이다. 따라서 2019년의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1%p 높다**.

② X: 2019년의 명목이자율은 1%이므로 예금하면 원금에 이자가 붙지만, 현금으로 보유하면 화폐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같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으므로 **예금이 현금 보유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금의 실질이자율이 -1%라는 것은 예금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뜻이며, 이자가 없는 현금이 더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1% - 2% = -1%이다. 이는 **2020년 물가 수준이 2019년보다 1%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④ X: 2020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이므로 전년보다 물가 수준이 낮아졌다. 같은 금액의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므로 **화폐가치는 상승하였다**. 화폐가치 하락은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나타난다.

NoteBase